

김승수 전주시장, 국가예산 확보 총력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 시의회 통과

정부세종청사서 기획재정부 간부 만나 핵심 현안사업 당위성 설명 정부 예산안 반영 건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조만간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전주시가 그린뉴딜과 영농산업 등 미래 지역발전의 이팔 핵심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최상대 예산실장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간부들을 차례로 만나 전주시 핵심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날 김 시장은 미래 신성장 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그린뉴딜 정인지식산업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쇠퇴하고 있는 구도심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또 가장 전주다운 문화기반을 만들기 위한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 댐 구축 ▲K-Film 제작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 구축 ▲세계 중심의 중심 한지마을 조성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말



28일 김승수 전주시장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 최상대 예산실장을 만나 전주시 핵심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까지 3차 심의를 진행한 뒤 9월 2일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

다. 시는 기재부와 소관 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정부예산안 반영을 요청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국민의 힘 전주시

동행의원 등 정치권과도 공조해 국가 예산 확보에 적극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김 시장은 올해 초부터 지역구 국회의원실 관계자와 국민의 힘 전주시 동행의원 보좌진과 잇따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소관상임위원회 의원실과 교류하는 등 정치권과의 공조체계를 유지해왔다.

또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간부공무원들은 지난 5월과 6월에도 꾸준히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세종청사를 찾아가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설득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의 미래를 이끌 성장 동력을 만들고 시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바꿔나가기 위해 국가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면서 "기재부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지역 정치권, 전북도와 끈끈하게 공조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물순환 건전성 회복 위해 조례 바탕으로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

전주시가 도로포장 시 빗물이 땅으로 침투되는 투수블록을 활용해 빗물 유출을 억제토록 하는 등 도시화로 악화된 물순환 건전성을 체계적으로 회복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최근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저영향개발 시설 설치 권고 ▲물순환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골자로 한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가 전주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용철 전주시의회의 발의로 상정된 이번 조례는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는 10년 단위의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과 물순환 회복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물순환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빗물의 자연 침투를 유도하는 투수성 포장, 침투도랑, 침투측구, 식생수로 등 저영향개발 시설을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 이상인 건축물에 도입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침수흔적 발생지역 등에 저영향개발을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시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2022년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도 환경부 물 안심도시 조성시범사업 공모에도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덕진공원 유역의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재생에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한편 물순환은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로 흐르거나 저장했다가 증발해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하며,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증발산 등을 통해 빗물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도시개발 기법이다. /김윤상 기자

25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받아야 국외체재 가능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이영희)은 국외로 출국하려는 병역의무자는 25세부터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24세 이전에 출국해서 25세 이후 계속 외국에 있고자 하는 병역의무자 또한 마찬가지다.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 출국한 1997년생은 오는 2022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경우 2022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는 재외공관 또는 지방병무청에 방문하거나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여행 목적별로 허가대상,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25세부터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외국에 있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다.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하면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40세까지 취업이나 관여업의 인허가 등이 제한되며,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고 여론발급이 제한되는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폭염 대응 예방접종센터·선별진료소 다양한 대책 가동

불볕더위 속에서도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는 코로나19 의료인력에게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줄 얼음조끼와 목걸이 선풍기가 지급됐다. 이와 함께 전주시지역 예방접종센터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해 이동형 에어컨이 가동되고, 화산체육관 내 관중석은 대기석으로 활용된다.

전주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원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진단 검사 실시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가동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화산·덕진예방접종센터의 경우 초저온 냉동고 등 백신 보관장비의 가동 중단에 대비해 UPS(무정전 전원장치)와 자가발전기를 설치하고 한국전력공사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했다. 예방접종센터는 또 실외에서 접종을

기대리는 대상자들을 위해 접수대기석과 예진표 작성 장소에 천막과 그늘막을 설치하고, 선풍기와 이동형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예방접종센터 운영인력에게는 얼음물과 냉매조끼 등이 지급됐으며, 방문객에게는 얼음물과 부채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는 화산예방접종센터에 대해서는 체육관 내 관중석을 실내대기석으로 활용해 실외 대기시간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시는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는 데다 임시로 설치돼 더위에 더 취약한 선별진료소에 대한 폭염 대책도 가동한다. 시는 검사자 대기공간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냉풍기와 선풍기를 가동하고 있다. 또 검사자에게는 부채를 제공하고, 운전자 등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인근 의료기관에 즉

시 후송할 수 있는 체계도 갖췄다.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는 방역요원과 검체채취 의료인력 등에는 방매조끼와 목걸이선풍기 등이 지급됐으며, 탈수 예방을 위한 제빙기도 마련됐다. 시는 향후 선별진료소 의료인력에 대해 근무복과 냉동고, 아이스박스, 아이스스카프, 포켓용 얼음조끼, 폭염응급키트 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연일 지속되고 있는 찜통더위 속에서 예방접종센터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시민들과 방호복을 입고 더위를 땀 흘리고 있는 의료진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코로나19 검사와 예방접종에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랑'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금융교육에 나섰다.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는 28일부터 30일까지 금압노인복지관을 시작으로

장애인복지관, 자활사업 참여자 등 저소득층 3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 피해사례에 대한 소개와 금융사기 피해 시 올바른 대처방법 등

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으로 이뤄진다. 이와 동시에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가계부채 증가, 신용대출 확대에 대해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신용관리, 부채관리, 서민금융제도 등의 금융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이 필요한 기관·단체는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063-281-0190)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방역수칙 위반 7개 업소 적발

전주시, 특별 단속 결과 일반음식점 7곳에 과태료 부과

전주시가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은 업소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7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20~30대가 자주 오가는 덕진동 대학가와 효자동 신시가지, 혁신동, 송천동, 아중리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 결과 7곳의 방역수칙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라 유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거리두기에 대한 긴장이 풀려가고 있는 것을 우려해 주간에는 대형 식당과 카페를 중심으로, 야간에는 유흥시설과 숙박업소를 비롯한 식당, 카페 등을 점검했다.

총 33명으로 꾸려진 점검반은 테이블

간격 1m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관리자 운영수칙을 위반한 7곳의 일반음식점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향후에도 특별점검반을 지속 가동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모든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며, 행사·집회는 인원이 5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홍보관 ▲실내수영장은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으며,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익일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기존 10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만 참여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